

악재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장 풀까

‘김수민 사태’로 안철수·전정배 대표가 사퇴하는 등 위기 상황을 맞은 국민의당이 소속 의원들의 발언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내부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에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첫 비대위 회의를 열어 분위기 쇄신에 나섰지만 거듭된 악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먼저 현재 진행형인 ‘김수민 사태’가 어디로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미 왕중현 전 사무부총장은 구속됐고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과연 검찰이 어떤 작태를 들이밀지 예단하기 어렵다. 만일 두 의원 중에 추가 구속자가 나올 경우 또 한번 당은 휘청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가족 보좌관’ 논란에 이어 국회 파행을 빚은 김동철 의원의 ‘대전 비하’, 유성엽 의원의 ‘이정현 옹호성 발언’ 등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으로 촉발된

김수민 사태’ 가라앉았지만 논란 계속 ‘김동철 막말’ 에 유성엽 발언도 도마위로 내부 단속 이끌며 당 재정비할지 주목

‘가족 보좌관 채용 논란’의 여파는 국민의당까지 미쳤다. 지난달 30일 손금주 국민 의당 수석대변인은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소속 의원 전원이 친 인척 보좌진을 임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러나 불과 수일 후 정동영 의원은 부인 7촌 조카를, 송기석 의원은 형수의 동생을 채용했다. 국민의당이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정동영 의원의 경우 처 7촌 조카에 이어 자신의 7촌 조카도 운전전을 겸임하는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을 털어놓아 당 지도부를

머쓱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조배숙 의원은 5촌 조카를 비서관으로 채용했다.

소속 의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서둘러 해명하려다보니 이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이들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조치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새정치 이미지와는 갈수록 멀어지는 느낌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 두번째 날 황교안 국무총리 질의에 나서면서 막말을 쏟아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적했고, 이장

우 의원에게는 “대전시민한테 물어봐,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저런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뽑아왔냐”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거듭했다.

유성엽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중견지역인문인 모임 세종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청와대 홍보 수석 시절 ‘세월호 보도개입’ 논란에 관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그리 했을 것”이라며 “안 듣기게 했어야 했다”고 밀해 빈축을 샀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민생정당·국민정당’으로 나갈 것을 재천명했다. 박지원 비대위의 순항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같은 소속 의원들의 돌출행동이 계속될 경우 국민의당의 앞날이 더욱 어두워질 것은 자명하다. 박지원 비대위가 가장 먼저 단속해야 할 부분도 이곳이다. /뉴시스

우원식 ‘가습기 특위 조사, 검찰·법무부 예외 아냐’

우원식 국회 가습기살균제피해국조특위 위원장은 7일 가습기 살균제 특위의 조사대상과 관련, “조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검찰과 법무부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에서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필요에 따라서 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여야간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서 (검찰과 법무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빠졌는데 이게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으로 넣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의 아주 중요한 요구사항이었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특검조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미 국정조사 대상으로 검찰을 넣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정도로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의) 능력 수사, 축소 수사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밝히는데 필요하다면 특검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옥시’와 관련, “검찰에서도 조사 못했는데 (영국) 옥시 본사도 국정조사의 주요 대상”이라며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할 건데 응하지 않으면 저희가 영국으로 가서 조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 시점에 과거정부 시기를 포함할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어느 정권이 문제다 이런 관점이 아니다”라며 “정부를 막론하고 관리와 대응에 문제가 있다면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신적 새누리당 원내대표나 우상호 원내대표의 언급은 옥시가 판매를 시작한 것이 2001년이라고 보는 시각”이라며 “그런 사실을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다. 이 사건의 시작은 94년 유공, 현재 SK 케미칼이다. 94년부터 지금까지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해 봐야 하는 문제”라는 뜻을 밝혔다. /뉴시스

더민주, 초선들 입단속... 조용천·표창원 구설에 초선 의원 간담회 열어... SNS·보좌진 응대 주의 당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초선 의원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경계령을 내렸다. 조용천 의원의 허위 의혹 제기, 표창원 의원의 ‘잘생긴 경찰’ 발언 등 초선들의 잇단 구설에 지도부가 직접 초선 의원 단속에 나선 셈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초선 의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내 전체 초선 57명 중 절반 수준인 29명만이 참석했다.

우 원내대표는 간담회 시작과 함께 국가 브랜드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손혜원 의원을 향해 “박수 한 번 쳐주자”고 제언했다. 의원들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박수로 손의원을 격려했다. 이후 모임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우 원내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초선들에게 SNS 사용 등 언행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우 원내대표가 SNS 사용을 막지는 않겠지만 감정 컨트롤이 안된 상태에서 하다보면 사고가 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초선 의원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유념해 달라고 당부한 정도였다”며 “격려해주는 등 분위기는 좋았다”고 덧붙였다.

다른 초선 의원은 “의원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주의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자리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내 초선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준비 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좌관을 대하는 태도 등에 대해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 뒤 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주의도 주고 격려도 해주는 그런 자

리였다”며 “공인으로서 좀 더 신중한 언행을 보여달라고 말씀드렸고, 한편으로는 또 야당 의원도 너무 가혹지 말고, 실수한 건 사과하고, 국회의원으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SNS, 언론인과의 사적 자리에서

너무 방심해서 막말을 하거나 하면 다 문제가 되니까 조심하라고 했다”며 “잘 몰라서, 방심해서 저지르는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경우에 이런 일이 생겼고, 저런 경우에 저런 일이 생겼다는 얘기를 해드렸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당정청 회동서 ‘박근혜 정부 국정 성공’ 한목소리

노동개혁·구조조정·규제개혁·추경 편성 등 하반기 과제 심도있게 논의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20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일단 ‘할렐루야’를 외쳤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청이 힘을 모으자는 데에 원론적으로 뜻을 같이 한 것이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동을 갖고 노동개혁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규제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박근혜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 과제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새누리당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나의 목표이고, 그 외에는 다 번뇌”라는 말씀을 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법 가치를 보더라도 우리 국민은 행복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당정청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고, 헌법적 가치 수호를 이행하는데 각별한 소명 의식으로 함께 힘을 합쳐나가면 한다”며 “당정청이 국민 행복·안전 보장, 민생경제 안정이라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만큼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긴밀하게 협력·협조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파로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대우조선해양 부실 문제를 포함한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 시급한 과제가 떠올랐다”며 “산업 구조조정 작업이 여론이나 단기적 관점에 매몰된 대응요법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발언기회를 가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4·13 총선 이전과 이후에 정치 환경이나 질서가 많이 달라졌다”며 “정부와 청와대도 대(對)국회,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폈다.

특히 그는 “당정청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말하는 공동운동체다. 최강의 ‘드림팀’을 꾸려야 한다”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끝판왕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1야당의 지도부도 8월 말이면 (구성이) 되고 내년이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여유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같은 상황인식을 제대로 해주셔야 한다. 정부와 청와대가 심기 일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하고, 여당으로서도 긴밀하게 입법 처리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해서 총력전을 벌여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종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도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이 하나가 되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힘을 합쳐서 화합의 정치를 펼침으로써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당정청간 화합을 당부했다. 이 실장은 “오늘은 우선 우리부터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치자는 모임으로 총리께서 주신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면 문제인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19대 국회 때 처리하지 못했던 규제

프리존특별법과 노동 관련법 등이 당정청이 힘을 모아 조속히 처리되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서 잘 해결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모두발언에 나선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박근혜정부의 성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당정청이 심기일전해서 국정현안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며 “당정이 추진해 온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의미있는 성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김태년 ‘추경, 사람에게 투자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와 관련, “과거 실패했던 추경사례의 전철을 다시 밟아선 안된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민주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이 정부부처와 지역의 숙원사업을 처리하는 눈먼 돈이 되어서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가계소득 문제 해결에 집중해 적극적 재정지출을 해야한다”며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경제위기 극복방안이자 성장의 지름길이다. 추경은 공공부문에서 직접적인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학자금 대출금리 0.2%p 인하

새누리당과 정부는 7일 한국장학재단 단에서 시행하는 2016학년도 2학기 정부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7%에서 2.5%로 0.2%p 인하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장우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및 브렉시트의 여파 등 향후 대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청년층의 학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로 기존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CCL) 대출학생(약 100만명)의 대출금리도 2.5%로 소급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금번 2학기 신규 대출학생(약 30만명)의 금리도 낮아져, 연간 학생의 총 이자부담이 약 165억원 경감될 전망이다. /뉴시스

이석현 ‘전재용 방지법’ 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노역장 유치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형법 개정안, 일명 ‘전재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더민주 소속 백재현·박홍근·박광운·소병훈·변재일·안구백·김해영·박경미·김병관·김현미·조정식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뉴시스

새누리 8·9 전대 선관위, 3개 소위 구성

새누리당 8·9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선관위 산하 3개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전대 개최작업에 착수했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선관위 1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 산하 ▲선거인단소위 ▲투개표 및 선거관리소위 ▲클린선거소위 등 3개 소위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선거인단소위는 이종배 위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정태욱 위원, 김연옥 위원이 참여기로 했다. 선거인단소위는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 결정하고, 선거인단 명부 작성 및 관련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투·개표 및 선거관리 소위는 유의동 위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김성태 위원, 송희경 위원이 참여한다. 투·개표 및 선거관리 소위는 투·개표 및 선거방법 등 선거업무 일체에 관해 결정하고, 중앙선관위와 업무협조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클린선거소위는 김성찬 위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이철규 위원, 박오찬 위원이 참여한다. 클린선거소위에서는 현행 법령 및 당규·당규 위반사과 선관위 결정사항 위반사항을 제보·접수 및 조사하고 선거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

지 대변인은 “당일명부 폐쇄일 지정을 오는 12일로 하기로 했다”며 “그 날짜에 따라 책임담당원이 정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컷오프 제도와 관련해서는 “비대위 회의에서는 컷오프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하지만 비대위 결정사안이 아니고 선관위 결정사안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넘겨 규정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정현, ‘보도개입’ 논란에도 당권 강행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KBS 보도개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끝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로부터 보도개입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 부분에 대해선 처음 문제 제기됐을 때 제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했다”며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친박계가 서청원 의원의 추대론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저는 오늘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출마는 경선에 나간다는 이야기”라며 서 의원 출마에 상관없이 완주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당청관계에 대해선 “당정이 됐든 당내가 됐든 어떤 경우에도 21세기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의 수직 또는 하향식 이라고 하는 관행이나 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문을 통해 “당 대표 출마는 저를 연이어 두 번이나 국회의원으로 선택해주신 정남 순천 시민들의 엄중한 명령이자, 제가 순천시민들에게 했던 약속이기도 하다”며 “현재 새누리당은 혁신, 쇄신, 개혁 이러한 화려한 말잔치만 할 뿐 다시 특권, 기득권에만 집착하고 있다. 국민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생 문제만큼은 야당의 시작으로 접근하고, 여당이 책임지겠다”며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병인 권력에 쫓겨가는 수직적 질서를 수평적 질서로 바꾸고, 울며 타어던 아이들이 성년이 되는 19년 간 보호하고, 도와주는 정당 그래서 2035년에 가서 첫 선거에서 선택받는 정당이 되도록 장기 비전 메뉴얼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